

행정법 (5급)

(과목코드 : 129)

2024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결서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형성력·불가쟁력·불가변력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기각재결이 있는 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있다.
- ③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은 인용재결이 있으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종전과 다른 사유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사례에서 B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청장은 B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결정하여 2023년 5월 22일 B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처분서가 송달되었다. B는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28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11일 B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후 B는 2023년 9월 22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았다. B는 A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① 2023년 5월 22일로부터 90일
- ② 2023년 7월 28일로부터 90일
- ③ 2023년 9월 11일로부터 90일
- ④ 2023년 9월 22일로부터 90일

3. 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 ②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④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4. 다음 중 권한의 위임 또는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기관이 대리 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대리기관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ㄴ.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취소사유임이 원칙이다.
- ㄷ. 위임전결의 경우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가 아닌 자가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으면 이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ㄹ. 개별법에 권한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이나 재위임이 허용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구역에는 육지와 그에 접속되는 바다표면, 기타 물의 표면도 포함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폐치·분합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써 정하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분쟁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회 안되면 분쟁 당사자가 시·도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6.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건축법」상 다른 법령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이다.
- ④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7.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과징금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할뿐더러 사안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된다.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부령)에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8.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②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에야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공법상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④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만 약 그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공무원법과 징계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도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
- ② 「양성평등기본법」상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어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후 같은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새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10.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경우라도 입영대상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 ④ 행정처분이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11. 다음 중 「행정기본법」상 과징금과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그 재량적 성격으로 인해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말한다.
- ②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권과 사권을 말하므로 영업기회나 이득가능성은 포함되지 않지만 철새도래지와 같은 자연·문화적인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 ③ 공용수용이란 재산권의 박탈을, 공용사용이란 재산권의 박탈에 이르지 아니하는 일시적 사용을, 공용제한이란 재산권자의 사용·수익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 ④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하므로 공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다음 중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의 재심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당사자는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다룰 수 없게 된 경우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처분의 재심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14.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다.
- ②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되어야 한다.
- ②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 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 ③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무효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16.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가장 적절하게 조합한 것은?

- ㄱ.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ㄴ.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이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ㄷ.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ㄹ.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로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① ㄱ(X), ㄴ(X), ㄷ(O), ㄹ(O)
- ② ㄱ(O), ㄴ(O), ㄷ(X), ㄹ(X)
- ③ ㄱ(O), ㄴ(O), ㄷ(O), ㄹ(X)
- ④ ㄱ(O), ㄴ(O), ㄷ(O), ㄹ(O)

17.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 ②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장관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구속적 행정계획안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 ③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

18. 다음 중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 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서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 ③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허용되며 이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19. 다음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처분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익을 제한되는 경우에서 기간을 일로 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다고 하여도 그 기간의 첫 날을 산입한다.
- ㄴ. 태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사람에 관해 행정관련 나이 계산과 표시는 14개월로 한다.
- ㄷ.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고, 그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도 동일하다.
- ㄹ.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 외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도 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 다음 중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
-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이다.
- ④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1. 법치행정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행정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ㄴ.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감소된다.

ㄷ.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ㄹ.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22. 다음 중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②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를 하여야 한다.
-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23.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과 별도로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4. 다음 사안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2003년 모월 모일에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공표(이하 '이 사건 대령진급 선발'이라 한다)되었다. 그러나 대령진급 선발 이후인 이듬해 육군참모총장은 A가 이 사건 대령진급 선발 이전의 군납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기하여 기소유예 처분 및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에게 A에 대한 진급낙천을 건의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위 건의에 따라 건의를 받은 달의 말일에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기하여 A에 대한 대령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위와 같이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A에 대한 진급낙천을 건의하는 과정이나 국방부장관이 A에 대하여 대령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따로 의견제출 기회나 소명 기회 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

- ①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인 군인사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A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③ A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A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A와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는 진급예정자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선발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예정자 명단 순위에 따라 진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예정자로서 가지는 A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5. 다음 중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합헌이다.
- ② 군인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장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다가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